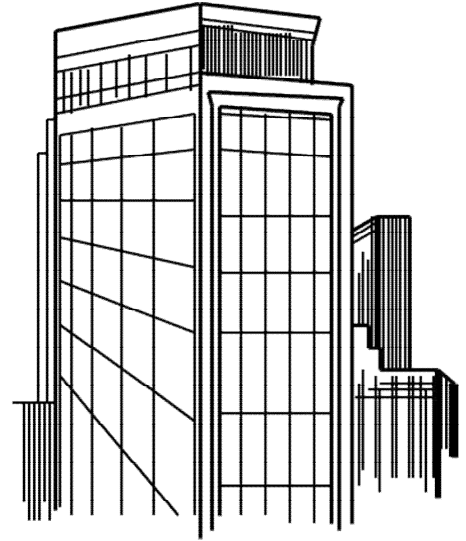


경영정보 브리핑

2021. 8. 30.~ 2021. 9. 10.



정책이슈

- ▷ 8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 및 9월 전망 P. 1
- ▷ 건설업 ESG 경영, 중요성 인식하나 여력은 부족 P. 3

유관·보증기관 동향

- ▷ 국가철도공단, 철도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P. 5
- ▷ 전기안전공사, 추석 연휴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전기재해 예방 안전관리 실시 P. 5
- ▷ 중견기업-에너지 공공기관, 탄소중립·ESG 이행에 힘 모은다 P. 6

금융

- ▷ 주간 경제지표 P. 7
- ▷ 델타변이 여파, 다소 늦춰진 정상화 일정 P. 8
- ▷ 中 전략 비축유 방출 P. 8
- ▷ 금융플랫폼 규제 시행 P. 9
- ▷ 8월 금융시장 동향 발표, 가계대출 여전히 증가세 P. 9

정책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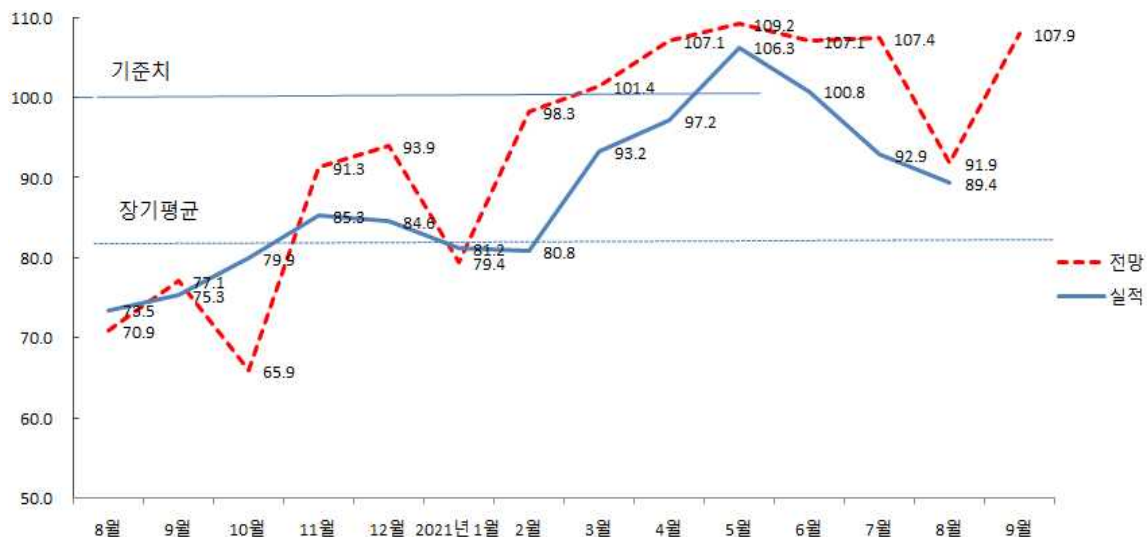
8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 및 9월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1. 2021년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대비 3.5p 하락한 89.4 기록

○ 하락요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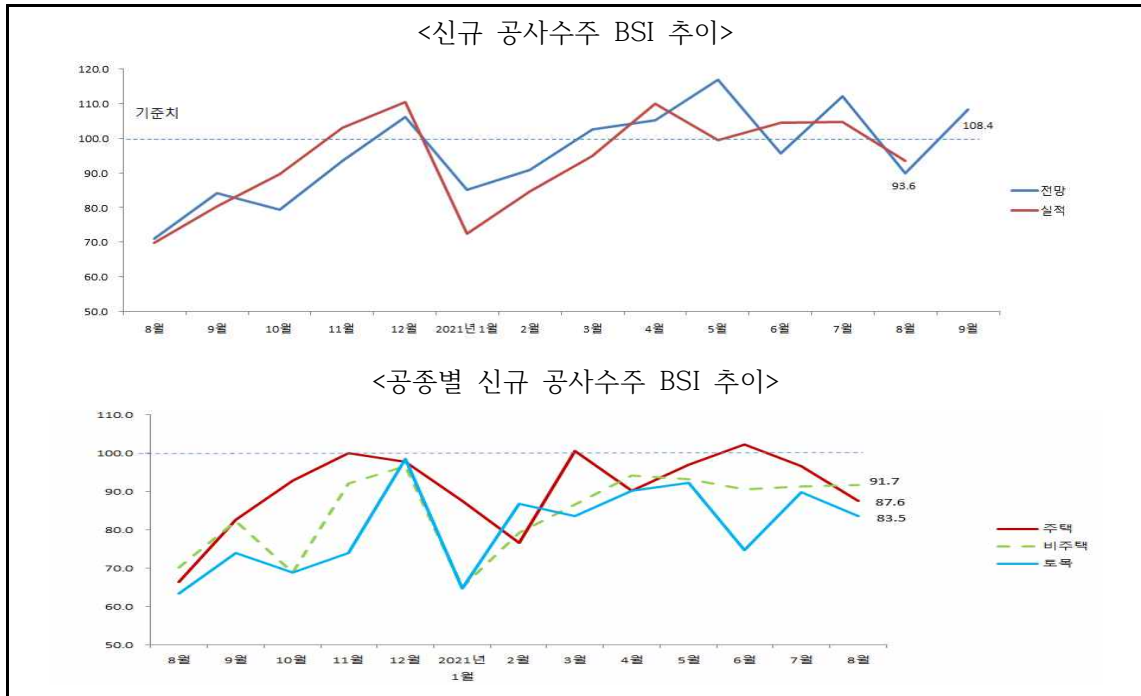
- 통상 8월에는 혹서기에 공사 발주가 감소하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지수가 4~6p 정도 하락하는데, 이러한 계절적인 영향 때문에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 실제 신규 수주 및 건설기성 BSI가 각각 전월 대비 11.1p, 12.5p 하락하는 등 공사수주 부진으로 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며, 주택과 토목공종의 물량이 다소 조정된 것으로 보임.
- 비록 7~8월의 부진으로 인하여 건설경기 회복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건설경기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건설경기 회복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21년 9월 CBSI는 8월보다 18.5p나 상승한 107.9로 전망되었는데, 대부분의 기업이 9월 건설경기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종합 CBSI 추이>



2. 신규공사수주 BSI는 전월대비 11.1p 하락한 93.5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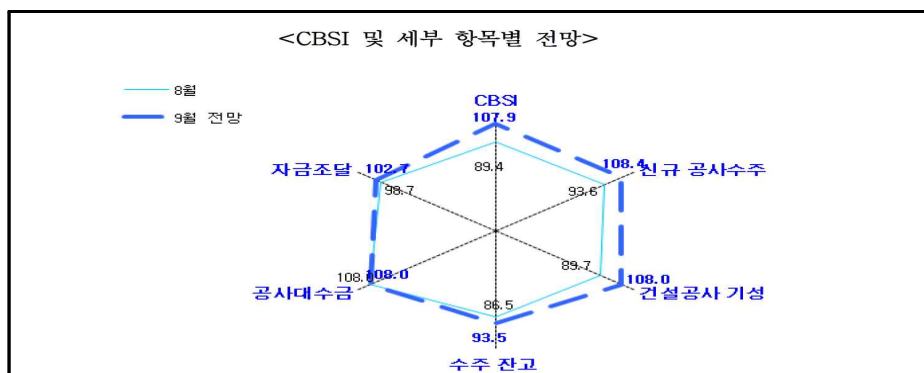
- 신규 공사수주 BSI는 11.1p 하락한 93.6을 기록. 지난 6월과 7월 2개월 연속 기준선 100 이상 기록해 양호했지만, 다시 10p 이상 하락
- 공종별로는 주택이 87.6(8.9p 하락), 비주택은 91.7(0.5p 상승), 토목은 83.5(6.2p 하락)를 각각 기록하여 주택과 토목이 감소.



3. 2021년 9월 CBSI 전망치, 전월 대비 18.5p 상승한 107.9로 전망

- 지수가 기준치인 100 이상이며, 전월보다 15.0p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9월에는 건설공사대수금을 제외한 모든 BSI가 전월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특히 신규 공사수주와 건설공사 기성금 상황이 전월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

< CBSI 및 세부 항목별 전망 >



■ 건설업 ESG 경영, 중요성 인식하나 여력은 부족

1. 건설업계 ESG 경영 중요성, 그러나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여력 부족

-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 및 비재무적 위험 관리 증대에 따라 ESG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ESG는 각각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영문 첫 글자의 조합으로 구성.
- 건설업 또한 ESG경영 실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대형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친환경 사업에 주력하는 중. 그러나 대형 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열악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ESG를 추진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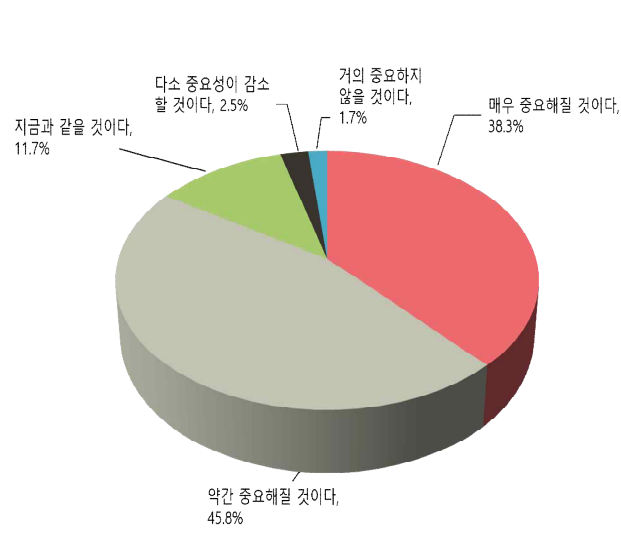
2.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1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 대상 ESG수준 조사결과

-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1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 대상 현재 건설업의 ESG 수준을 조사한 결과 '보통'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업체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건설업의 ESG수준을 낮게 인식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음.

<표 1> 현재 건설업의 ESG 수준평가

구분	매우 낮은 수준	↔		보통	↔		매우 높은 수준
		2	3		5	6	
	1	2	3	4	5	6	7
시공능력평가 순위별	1~30위						
	31~100위						
전체							

<그림1> 향후 건설업 ESG 경영의 중요성 여부



<그림2> ESG를 위한 현재 조직 내 준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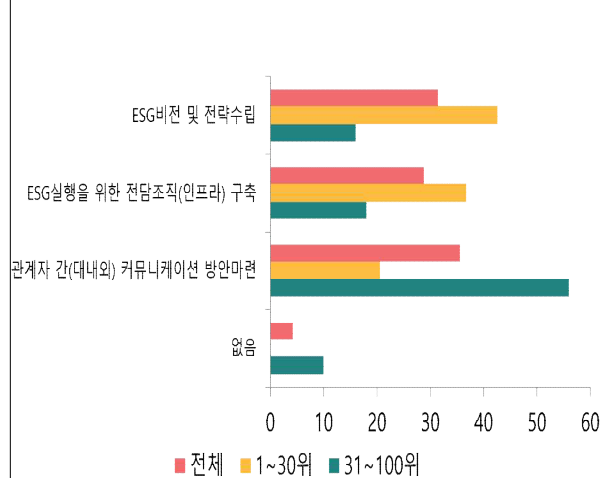


표 및 그림 출처 : 최은정(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업체 경영 현안 및 대응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향후 ESG경영에 대해서 응답자의 84.1%가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답해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ESG를 위한 조직 내 준비사항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2 참조>).
- 30위 이내의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응답자의 42.6%가 'ESG 비전 및 전략 수립을 하였다'고 답한 반면, 30~100위 건설업체는 16%에 그침. 종합해보면, ESG 경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규모별로 차이가 크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3. ESG 경영을 위한 우선순위 선별 필요, 정부의 정책 지원도 함께 진행되어야 함.

- 향후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ESG 경영이 조직문화화 및 내재화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건설업체는 조직 내 필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건설업의 ESG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제 822호, 9. 6.(월))

유관 · 보증기관 등 동향

■ 국가철도공단, 철도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 국가철도공단은 10월 29일까지 철도시설물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한다고 지난 31일 발표.
- 공단은 안전본부장을 총괄반장으로, 한국철도공사와 민간전문가 등 총 96명이 참여하는 '철도분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등급 C등급 시설물 중 50년 이상 경과한 교량 구조물, 자연재해 취약개소, 철도역, 낙석·산사태 우려개소, 운행선 인접공사 현장 등 117개소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
- 특히, 비탈사면 등 점검자가 접근하기 어렵거나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드론을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로 함. 또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자연재해, 화재 취약요인 존재 여부 등 철도 이용자의 시각에서 안전위험 요인을 찾을 계획. 안전 정보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결과를 공개할 예정. (이데일리, 8. 31.(화))

■ 전기안전공사, 추석 연휴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전기재해 예방 안전관리 실시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추석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과 병원, 숙박시설 등 사람들의 방문이 잦은 시설들을 대상으로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3일 발표.
- 이번 안전관리는 오는 22일까지 전국의 전통시장과 병원, 백화점, 숙박시설 등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1만 2,000여 곳을 중심으로 진행됨. 공사는 해당 시설들에 대해 정부, 지자체 등과 함께 집중 안전점검을 펼치는 한편 연휴기간 중 대규모 정전이나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상황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전기안전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 (전기신문, 9. 3.(금))

■ 중견기업-에너지 공공기관, 탄소중립·ESG 이행에 힘 모은다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서울 더존을지타워에서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에너지 공공기관장들과 '중견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탄소중립 경영 확산 간담회'를 개최.
- 간담회는 ESG·탄소중립을 위한 중견기업과 에너지 공공기관간 협력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됨.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중견기업연합회는 탄소중립을 위한 중견기업의 적극적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 탄소중립 지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 에너지 공공기관 인프라를 활용해 중견기업 탄소중립 경영을 지원. 에너지 분야 중견기업 역량 강화도 추진.
- 정부는 ESG·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해소하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중견기업의 적극 동참을 요청. 또 수출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한도 상향 조정 등 중견기업의 신시장·신사업 진출과 핵심 산업생태계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전자신문, 9. 3.(금))

금 용

▣ 주간 경제지표

기간 : 2021. 8. 27 ~ 2021. 9. 9

구 분	변 동 폭	8. 27 기준가	9. 9 기준가
KOSPI	▼ 19.20	3133.90	3114.70
KOSDAQ	▲ 11.11	1023.51	1034.62
S&P500	▼ 16.09	4509.37	4493.28
CD(91일, %)	▲ 0.01	0.92	0.93
국고채(3년,%)	▲ 0.091	1.408	1.499
회사채(3년, AA-, %)	▲ 0.079	1.842	1.921
국고채(10년, %)	▲ 0.061	1.939	2.000
미국고채(10년, %)	▼ 0.013	1.310	1.297

□ 증시

- [국내] 국내 경기둔화 우려 및 미 성장률 둔화 우려로 인한 하락과, 플랫폼 기업 규제에 인한 네이버 및 카카오 급락이 지수 하락을 견인.
- [미국]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소비 둔화 우려 등으로 인하여 미국 성장률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증시 하락.

□ 금리

- [국내] 기준금리 상승과 발표된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매파적 색채로 인하여 단기물 위주로 상승. 국고3년 금리는 22개월 만에 최고치 달성함.
- [미국]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한 불확실성 및 단기 지속 하락에 따른 채권 매입세 유입으로 장기물 금리 하락.

■ 델타변이 여파, 다소 늦춰진 정상화 일정

- 美 8월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23.5만명으로 예상치인 73.3만명을 크게 하회하였음. 노동부는 지표 부진이 델타 변이 확산세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함. 금번 고용지표는 연준의 테이퍼링 일정을 가늠하는 데 핵심 변수였던 만큼 향후 테이퍼링 시작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으며, 발표시점이 11월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됨. (국제금융센터 9. 8.(수))
- 우리나라 역시 8월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었으나, 금융안정 목적이 강하며 2차 추경 집행 효과를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임. 금리인상에 따른 효과로 가계 이자 부담이 약 3.1조원 증가 하였으며,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일부 상쇄될 여지가 있음. 델타변이로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 개선이 제약될 소지가 여전히 상존하며, 경기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는 10월에 연속적인 금리인상 단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한국투자증권 9. 1.(수))

■ 中 전략 비축유 방출

- 9일 중국이 유가를 낮추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처음으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며 국제 석유 시장에 전례 없는 개입을 단행하였음. 중국 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당한 수준이며, 경제 전반의 부담을 줄이고자 전략물자를 방출한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의 비축량 해제 계획으로 유가는 전날보다 1.7% 하락하였음. 그러나 중국의 석유 가격 비축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추어 석유 수요를 식히려는 것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시장은 분석함. (블룸버그 9. 10.(금), 매일경제 9. 10.(금))

■ 금융플랫폼 규제 시행

-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의 정보를 전달하면서 상품의 계약내역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계약 절차를 해당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는 행위를 '광고'가 아닌 '중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함.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24일까지 위법 소지를 해소해야만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이 허용됨.
- 해당 규제로 인하여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는 투자자의 매도로 급락하였으며,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다음 달 상장하는 카카오페이 등의 서비스 상당부분이 중단될 위기에 놓임.
- 금융위는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이며, 빅테크에 대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강조함. (매일경제 9. 9.(목), 한국경제 9. 9.(목))
-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조선일보 9. 10.(금))

■ 8월 금융시장 동향 발표, 가계대출 여전히 증가세

- 한국은행이 8일 발표나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7월 말보다 8조 5천억 원 증가함. 기준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시행으로 증가폭은 축소하였으나 오름세는 지속된 것으로 나타남.
- 한은 관계자는 가계대출 추세와 관련하여 주택수요, 생활자금 등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급격히 둔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힘. 다만 7월부터 시행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효과, 주택 시장상황, 대출금리 추이 등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힘. (매일경제 9. 8.(수))